지산IC~조선대 우회도로 지반 침하 원인은 '부실시공'

동구 분석…도로 밑 흙 제대로 안 다져 개통 한달도 안돼 폭우에 땅 꺼져
배수 능력 부족도 한 원인…복구 최선 속 시공 불량 피해 보상 청구 방침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한 '지산IC 진출로~조선대 사범대 우회도로'에서 발생한 침수, 지반 침하의 근본 원인은 부실시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42억여원을 들여 도로를 개통하고도 한 달 만에 폐쇄하고, 보수 공사에 당초 예산의 14.3%에 달하는 6억여원을 추가로 들이기로 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보수공사에 동절기 기간이 포함돼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부실 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7~9월 지산IC 진출로~조선대 사범대 우회도로 관련 복구 TF팀을 꾸려 원인 분석을 한 결과 도로 밑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는 등 부실공사 정황이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도로는 제2순환도로 산수터널에서 지산터널 방면 출구 램프부터 조선대 사범대학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45m, 폭 10m 왕복 2차로다. 총 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착공, 지난 6월 개통했다.

도로는 지산동 주요 관문 도로인 지호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남문로 등 교통체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개통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광주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지반 침하가 잇따르자, 동구는 지난 7월 12일 도로를 폐쇄하고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동구는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 3명을 모아 복구TF팀을 꾸리고 7차례에 걸쳐 원인분석을 한 결과 지반 침하 원인으로는 '다짐 불량', 침수 원인으로는 '도로 배수 능력 부족'이 꼽혔다.

지표면으로부터 8~9m 높이로 흙을 쌓아올린(성토) 뒤 아스콘을 얹는 식으로 시공했는데, 시공사 측이 이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TF팀은 도로 개통 이후 차량이 오가면서 흙을 다져줘야 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비를 맞아 지반이 불안정해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한 이 도로는 현행 도로 개설 기준에 따라 30년 빈도(30년 만에 한번 내릴 가능성)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당 70㎜의 강우량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됐는데, 장마 기간에 시간당 80㎜가 넘는 비가 쏟아지자 침수로 이어졌다는 점도 확인됐다.

동구는 최근 시공사 측에 다짐 불량 등에 대한 하자 보수 요청을 했으며, 조만간 시공 불량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동구는 이달 말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복구에는 총 사업비 6억 5300만원이 투입되며, 침수 피해가 컸던 80m 길이의 구간을 보수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광주시 동구 지산동과 조선대 사범대를 잇는 도로가 지반 침하 및 침수 피해를 입어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먼저 도로 밑에 쌓인 흙 7015㎥(덤프트럭 500대 분량)를 모두 걷어내고 새 흙으로 채울 계획이다. 한번 형태가 흐트러진 흙은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TF팀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도로 밑 흙을 받쳐주는 옹벽 45m(높이 3.5~4.9m)도 다시 구축한다. 이 옹벽은 장마 이후 물을 머금은 흙 무게에 짓눌려 개통 당시에 비해 13.1㎝(3도 가량)까지 기울어진 상태다.

동구는 도로 측면에는 배수구(측구) 303.5m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배수구 502m를 보강하고 침전조도 보강 작업을 거쳐 배수 능력을 기존보다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동구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도출하느라 시간이 지체됐고 공사 기간에 동절기가 끼어 있어 시공 기간도 더 늦춰졌다"며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린 만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묶듯 공사를 하다 안전도 잃고 혈세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극한 기후가 심해지고 있는 터라 자연 재난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 공사해야 하는데, 그만큼 공학적인 대비를 잘 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로 중간 부분을 뚝 끊어서 흙을 모조리 교체한다는 것 자체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 개설 시 30년 빈도의 재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이 낮게 책정됐지만, 최근에는 100년 빈도 수준의 '극한 기후'가 잇따르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보다 웃도는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퇴사한 것 처럼 꾸며 실업급여 부당 수령 '딱 걸렸네'

노동자 23명·사업주 3명 적발
광주노동청, 2억5900만원 환수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노동자와 사업주가 노동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은 7일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도 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온 노동자 2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짜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했다고 속여 고용 보험 상실·이직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자 A씨 등 2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3200만원)와 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부정 수급자 B씨 등 3명은 퇴사는 했지만 사업주와 공모해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했음에도 새 직장의 급여를 친인척의 명의로 받는 방법으로 실여급여(3500만원)를 따냈다.

적발된 다른 부정 수급자 C씨 등 3명은 재취업을 했음에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체결일을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 작성,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3100만원을 받았다.

노동청은 이들로부터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억 5900만원을 환수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실직자 중 인터넷 실업인정 IP주소와 이직사업장 IP주소가 동일한 65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5명 중 23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 이중 16명이 사법처리됐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3명도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계기로 11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해외체류 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192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하역작업 중 지게차에 치여 근로자 숨져

광주의 차체부품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40대 작업자가 하역작업 중인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한 공장에서 A(49)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지게차에 깔렸다. A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공장은 차체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 B씨는 제품 하역 작업을 하던 중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지게차 앞에 적재된 물건 때문에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8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단촉구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급식보조금 꿀꺽…아동센터 운영자 징역형

출석부 허위 작성해 빼돌려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급식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아동센터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서구의 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의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광주시 서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급식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간헐적으로 방문한 아동들의 대리 서명을 하거나 나오지 않은 아동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에 대한 지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일부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자체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복지 예산의 적정 사용과 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아동센터가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아동센터를 현재 폐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1100만원 금품 훔친 30대 구속

광주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주차된 차량 7대를 턴 A(34)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차된 차량에서 골프채, 노트북, 신용카드 등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훔친 장물은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경찰은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